

홍보위 신설결정 총회 분과위제 부결 치협총회 성료...강한치협 한 목소리

치협 대의원 총회 분과위원회제 도입이 논란 끝에 부결됐다. 또 홍보위원회 신설이 결정됐으며, 치협 인준 분과학회 외에 준회원학회제 도입도 무산됐다.

아울러 주2회 발간 예정으로 짜여진 치의신보 예산이 통과돼 치의신보는 치과계 역사상 처음으로 주2회 발간 전문지로 재탄생하게 됐다.

치협은 지난 19일 치협 대강당에서 제5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2002년도보다 2억7백여만원 늘어난 2003년도 예산 34억6천4백여만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주2회 발간을 목적으로 짜여진 치의신보 특별회계예산 27억7천7백여만원을 원안대로 승인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홍보위원회 신설 ▲분과위원회제 도입 ▲치협 인준분과학회 외에 준회원 학회 도입 등 정관개정이란 5항이슈로 논의됐다.

총회 분과위원회제 도입과 관련, 찬성 대의원들은 대의원총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오전에 3개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안, 일반의안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오후엔 본회의에서 의결해 총회를 축제분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도입 반대 대의원들은 치협 내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장소가 없고 분과위원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등 난색을 표명해 결국 표결에 돌입, 재석의원 125명 중 찬성 62명과 반대 63명으로 재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됐다.

홍보위원회 신설안과 관련, 일부에서는 공보이사를 2명 뒤 경비 등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보이사 1명이 치의신보와 대외적인 홍보까지 맡는 것은 업무부담이 너무 크고 홍보의 중요성이 날이 강조되는 만큼, 홍보위원회 신설여론이 우세했다.

홍보위 신설안 역시 표결에 돌입, 재석의원 125명중 찬성 105명, 반대 15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치협의 홍보를 담당할 홍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인적, 재정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오던 치협의 대국민 홍보역량이 더욱 강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분과학회에서 정회원학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하면 준회원학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분과학회 준회원제 도입 정관개정안도 표결에서 재석 125명 중 찬성 55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에서 현재 진행중인 KDA-IT 사업관련 치과 신협과의 사업 중복성 부분이 있어 의견차가 대두, 논란을 벌였다. 특히 일반안건 심의에서 인정의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올랐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인정의를 원하는 개원의들에게 지부·학회 등에서 모두 발급해 주면 메리트가 없어지는 만큼, 해결될 수 있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치협은 보다 강력한 해결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학회·지부치협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 새로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대치과병원법 국회 통과 치의 자존성 확보·치의학 독자발전 길 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은 지난 96년 이기택 집행부 시절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이래 정재규 현 집행부까지 7년여 동안 '근성추진' 끝에 햇빛을 보게 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독자 경영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은 법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7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는 '국립대학교 병원 설치법' 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한 만큼, 상대적으로 손쉬운 전망이다. 그 동안 서울대 치과병원 병원장은 사실 치과 진료부 부장으로 예산권과 인사권도 없이 서울대병원 측의 운영방침에 따라야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치과병원의 푸대접론이 일고 치의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의과와 뿌리가 다른 치과의사들이 의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등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해 치협은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7년여간 지속 추진해 왔다.

치협은 일단 서울대병원법이 독립한 후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치대 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수

립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립 서울대 병원 설치법에 관련돼 있고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은 국립대 병원 설치법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7년여 동안 치협 산하에 국립대 치과병원독립법인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수십 차례 회의와 교육 인적자원부, 복지부 건의 등을 추진해 오다 의과 쪽의 보이지 않는 견제와 정부의 물이 해로 행정입법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0년 고민 끝에 의원입법으로 급선회,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화중 장관의 이해를 구해 법안의 기초를 잡았다.

이후 국회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법 추진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 당시 김화중 의원의 동의하에 지난해 11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데 성공하고 발의 6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법 제정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협회장 당선 전 치무담당 부회장으로서 7년간 독립법인화 현안 문제를 풀어온 정재규 협회장은 "법제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협회장이었던 이기택 명예회장, 김화중, 이재정 의원,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박창달 의원, 임성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 장영일 현 병원장, 한영철, 조영수 전 치무이사, 이병준 현 치무이사 그리고 각 국립치대 전 현직 학장, 병원장들 등의 노력과 회원들의 지지 속에 이룰 수 있었던 만큼,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특히 "이제 서울대 치과병원법 설치법이 제정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국립대병원 설치법도 개정, 임기 내에 치의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닦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